

육계 자조금, 농가 홍보가 우선이다

우여곡절 끝에 육계에서도 의무자조금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누가 낼 것이냐는 자조금 거출 대상에 대한 육계계열농가와 육계계열업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 지연됐던 자조금 거출이 양측의 대화로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무자조금은 왜 필요할까.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을 살펴보면 의무자조금 제도가 정착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거출된 금액으로는 소비 촉진을 위한 TV 홍보 등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굳이 머나먼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거출한 양돈과 올 5월부터 시작된 한우를 살펴봐도 의무자조금 시행으로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양돈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했던 전·후지 등의 부위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또 황신혜 등 인기 연예인을 앞세운 '웰빙 삼총사'를 TV 광고로 부각시켜 돼지고기 소비에 큰 일조를 했고, 결국 지육단가가 kg당 4,000원 을 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고돈가 현상이 일기도 했다. 물론 의무자조금 거출만으로 양돈업계가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조금이 상당한 일조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재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자조금 거출금의 액수는 양돈의 경우 두당 400원, 한우는 두당 2만원으로 도축할 때마다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 양돈자조금은 납부율이 5월 93.2%, 6월 92.2%, 7월 88.8% 등 매월 90%를 상회하고 있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의무자조금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양돈과 달리 최근의 육계자조금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과연 의무자조금이 수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모 협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내용은 너네가 왜 농가로부터 돈을 빼앗아가냐, 닭고기 가격이 바닥세를 걷고 있는데 자조금이 닭고기 가격을 회복시켜줄 수 있느냐 등을 강력히 항의한 채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최근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한 자조금 대의원선거 관련 안내물을 받은 농가가 자조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만을 보고 전화를 건 것으로 추측된다. 정작 자조금에 적극 참여해야 할 농가들이 자조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계육협회가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

한 세미나에서도 진풍경이 벌어졌다. 정부 관계관이 육계 의무자조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도중 일부 농가들이 자리를 뜬 것. 왜 나왔느냐는 계열업체 사육담당자의 질문에 농가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 아니냐'며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직 자조금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 모르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을 시행한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갈취해 가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농가 홍보가 중요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정작 관련 단체들은 농가홍보는 뒷전으로 한 채 자기 영역 싸움에만 관심을 가져 결국 상당수 농가가 여전히 자조금을 모르는 상황까지 초래된 것이다.

의무자조금 시행 과정 중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 문제가 되고 있다. 육용종계업자들은 최근 종계분과위원회를 통해 육계와 별도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육계와 종계 모두 육계산업이 발전하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최종 목적지가 있지만 과정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계도 자조금 조성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은 육계와 마

찬가지로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사업으로 사업방향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굳이 따로 조성하겠다고 하니 답답함이 없지 않다.

종계업자들이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대의원과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숫자에서 육계에 밀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 따로 조성

하자는 의도가 내심 깔려 있어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 는 않다.

육계 의무자조금은 육계농가의 발전과 보호는 물론 양질의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닭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지금, 육계의무자조금의 시행이 시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협중앙회와 각 생산자단체 그리고 육계농가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육계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의무자조금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조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육계농가들을 위해 대의원선거일 전까지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C



이현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